유엔의 북핵 대북제재조치의 실효성과 북한의 체제생존전략

김주삼 조선대학교

논문요약

북한은 2006년 1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2017년 9월까지 총 6차례의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체제수호와 방어적 차원에서 핵무장력 담보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핵실험의 전략적 목표가 북미협상을 통해 북한체제 위기를 극복하고 그들의 한반도 사회주의통일을 위한 핵무장력을 완성하는 데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북한의 계속된 핵실험은 한반도평화를 위협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고 있으며, 동북아안보 역학구도에 간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유엔안보리는 이러한 북한의 무모한 핵실험에 대해 지난 10년 이상 6차례의 유엔안보리 결의로 대북제재조치를 단행해 왔다. 그러나 북한 김정은 정권은 유엔과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핵 · 경제병진노선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조치가 북한에 대한 효과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 것은 북한이 강도높은 핵실험으로 격상시키는데 요인으로 분석된다. 2017년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제재 조치 수단 가운데 하나인 대북 군사옵션은 한반도에서의 전면전과 국지전 양상으로 예상된다. 미 트럼프 행정부는 이전의 미국 행정부의 대북제재 조치 양상과는 다르게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외교압박전술을 시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조치에 대해 북·미 간 전면적인 군사대결 입장을 밝히며 '벼랑끝 전술'로 맞서고 있다. 북한은 당분간 체제생존차원에서 핵 · 경제병진노선을 추진할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체제는 미·중 간의 현실주의적 국가전략 추진으로 체제붕괴 변수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전략적 선택의 폭은 좁아진다.

주제어 : 북한 핵실험, 유엔의 대북제재, 체제 생존전략, 북미관계, 체제붕괴 변수

www.kci.go.kr

Ⅰ. 서론

북한은 2006년 제1차 핵실험을 시작한 이래 2017년 9월까지 총 6차례의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북한의 최초 핵실험이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호전된 남북관계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상당한 충격을 가져왔지만, 보수정권인 이명박 정부-박근혜 정부에 이어 최근 집권한 문재인정부에 또다시 핵실험을 감행한 것은 한국의 대북정책과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 전략수립에 시사한 바가 크다고 하겠다. 그동안 유엔과 미국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유엔안보리 결의를 통한 대북제재 조치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유엔과 미국 등 국제사회의 비난과 대북제재를 무시하고 계속 핵실험을 감행해 왔다.

북한의 핵실험의 강도와 성능은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플루토늄 방식에서 우라늄 핵실험으로 발전하였고, 북한은 이제 수소탄 실험까지 했다고 선전하였다. 북한은 핵실험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3원체계를 달성하기 위한 핵잠수함 미사일 시험발사(SLBM)와 사거리를 연장한 대륙간탄도탄미사일(ICBM) 시험발사까지 계속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사거리를 더 연장하여 미군기지가 있는 괌기지에서 미국 본토를 겨냥한 대미 결사항전의 자세까지 보이고 있다. 이처럼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를 김정은 체제의 공고화와 체제결속을 다지는 계기로 삼으면서 대미 항전의지 고취와 핵·미사일로 대남위협 수위와 자신들의 존재감을 격상시켜 북미전쟁발발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북한의 핵개발은 김일성정권 시절인 1950년대 중반에 시작하여 김정은 3대세습 체제로 이어져 내려오면서 소형화, 경량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운반체인 미사일 능력도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핵잠수함 미사일(SLBM) 방식 등 다용도 미사일개발과 표적 역시 사거리 기능이 훨씬 장거리로 계량돼 왔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전략무기 개발은 한국의 미군 사드배치 등 한반도평화 위협 증가와 동북아지역 정세에 커다란 불씨를 야기시키면서 미국과 중국의 한반도에서

www.kci.go.kr

의 주도권 경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유엔과 미국 및 국제사회는 지속적인 북한 핵실험에 대해 유엔안보리 결의와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한 대북제재를 계속 추진해 오고 있으나, 그 실효성은 아직 현실적으로 북한체제의 변화를 가져올 만큼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유엔의 대북제재효과와 향후 대북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계속 제기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그동안의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 군사옵션을 제기하고 있으나 미국의 실질적인 대북 군사행동까지 옮길 지는 미지수이다.

한편 북한은 유엔과 미국 및 국제사회의 북한 핵실험에 대한 대북제재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면서 관례대로 주민동원과 규탄대회를 개최하여 체제결속과 대미, 대남 비방과 김정은체제의 찬양과 지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유엔과 미국 및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응수하고 있다. 북한은 2017년 10월 노동당 중앙 전원회의 제7기 2차 회의에서 일부 개각을 통해 세대교체 및 김정은 체제 인사를 노동당에 포진시켜 핵·경제병진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유엔의 북한의 지속적인 핵실험을 감행에 대한 유엔안보리 결의에도 불구하고 제1차 핵실험에서 6차 핵실험에 이르기까지 유엔의 대북제재 조치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이에 대한 문제점들을 제기하고자 한다. 북한은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시절'에도 불구하고 체제가 붕괴 위기 상황하에서도 선군정치를 통해 체제생존을 계속 해 왔다는 점에서 최근 유엔과 미국, EU 그리고 국제사회의 전방위적인 대북제재 조치에 대한 북한의 체제생존전략을 살펴보기 위함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유엔의 북한 핵실험에 대한 대북제재조치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제2장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본 연구에서 활용될 수 있는 상관이론들을 적용해 보고자 하며, 제3장에서는 그동안 북핵과 미사일개발에 대한 유엔과 미국 및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조치의 실효성에 대해 알아보고, 제4장에서는 대북제재에 대한 북한의 생존전략을 분석하며, 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으로써 연구내용을 함축하고 향후 북한이 내세울 수 있는 생존전략에 대해 전망하고자 한다.

www.kci.go.kr

Ⅱ. 선행연구와 관련이론 적용

1. 북한의 핵실험 목적과 이유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2017년 신년사'에서 동방의 핵강국과 대륙간탄도탄(ICBM)시험발사 마감단계 진입을 목표로 정하고 핵실험과 미사일시험발사를 계속 해 왔다(통일부 2017, 1). 북한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세습 체제에 이르기까지 총6차례의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결국 북미대결에서의 자위적 확보차원이라는 정치적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한 명분아래 전략무기를 개발하였고, 이로 인해 남북한의 군사비대칭적 구도는 이미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 헌법개정에서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을 지도이념으로 정한 바 있는데, 2009년 당규약에도 "조선노동당은 선군정치를 정치의 기본방침"이라고 규정하였다(히라이 히사시 2012, 54-59). 이는 선군정치가 강조된 김정일 정권에 이어 김정은 체제에서도 군부의 위상과 역할이 그만큼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쉽게 짐작하게 한다.

지구상에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는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이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이며, 비공식적으로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이다. 북한은 6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자신들이 핵보유를 선언은 하고 있으나, 현재 국제적으로 공인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유엔이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유엔안보리를 소집하여 대북제재 조치를 취한 이유는 1993년 북한이 가입한 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이 1985년에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하여 회원국으로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를 2003년에 탈퇴하여 북핵6자회담이 시작된 후 2006년에 1차 핵실험을 하고 2009년에 북핵6자회담장에서 퇴장하여 결국 북한의 불참으로 북핵6자회담은 중단된 상태이다(고봉준 2017, 191-197). 그럼에도 불구하

www.kci.go.kr

고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하고자 하는 이유는 사회주의 강국 건설과 미국 본토 전역을 사정권에 두며, 김일성과 김정일의 유훈통치를 계승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김정은 2018년 신년사 전문).

2. 유엔의 북핵 대북제재 조치사례

지금까지 북한의 6차례 핵실험을 분석해 보면 김정일 정권에서 2차와 3차(2006년, 2009년)를, 김정은 정권에서 4차-6차 핵실험(2013년, 2016년 1월, 9월, 2017년)을 감행하였다(김주삼 2017, 1300). 북한의 6차 핵실험은 최초 핵실험 시기인 2006년에는 강도가 1킬로톤에 불과했으나, 2차 3~4킬로톤, 3차와 4차 핵실험에서는 6~7킬로톤으로 강도가 점점 늘어났고, 제5차 핵실험 때는 10킬로톤으로 점점 강도가 높아져 왔다. 그러나 2017년 북한의 6차 핵실험 강도는 작년 5차 핵실험과는 판이하게 다르게 강도가 수 배에서 많게는 10배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 지난 북한의 10년간 핵실험 장소는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동일 장소에서 모두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유엔안보리 결의사항에 따른 대북제재 조치는 국제관계가 유엔이라는 국제적 기구가 존재하지만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유엔안보리 강대국들이 핵개발로 유엔에 회부된 북한에 대해 선제타격이나 선제공격을 한 사례는 아직 찾아볼 수 없다(박휘락 2017, 274-279). 유엔은 유엔안보리에서 이러한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약 10년 이상 유엔안보리결의 통해 대북제재조치를 교역품목과 사치용품 등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해왔으나 북한은 이러한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조치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핵실험을 성능을 높여 왔다. 이는 북한이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조치 효과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유엔의 대북제재 조치 내용도 제1차 핵실험부터 제6차 핵실험에 이르기까지 제재품목과 대상 등이 다양하지만 제6차 핵실험 대북제재조치만 제외하고 북한체제 붕괴위기와 같은 직접적인 타격을 가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분석된다. 그러나 유엔의 6차 핵실험 대북제재조치는 유엔을

www.kci.go.kr

비롯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대적인 대북제재 압박 수위가 높아졌으며 나아가 대북 금융조치와 원유공급 제한 등 제재조치 강도가 한층 강화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3. 북한의 체제생존전략

북한체제는 20세기 지구상에 출현한 사회주의국가들 가운데 뚜렷한 차별성이 나타난다. 정성장과 이종석은 북한체제에 대해 북한은 1인 절대권력과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는 다른 사회주의권 국가들과는 독특한 사회구조인 북한특수주의 국가로 평가하고 있다(정성장 2011. 37-49, 이종석 2016, 148-169). 이는 북한사회주의 헌법에서도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비교가 되는 주체사상과 선군정치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개정판, 2012). 북한체제는 당·정·군 관계에서 정치체제와 사상적 영도격인 수령제 하의 경제시스템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다르게 일원화, 국가소유제, 스탈린식 중앙집중적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가 유지되고 있으나,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이후 이러한 중앙정부의 경제통제시스템이 현실과 이완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통일부 통일교육원 2015, 171-176). 이 뿐만 아니라 북한사회주의 계획경제통제시스템은 경제하부 단위까지 개입하고 있다. 다른 사회주의국가에서는 계획지표가 명령지표보다 지도지표의 성격을 띤 것으로 나타났으나, 북한만큼은 명령지표가 지도지표를 앞서고 있는 명령형체계인 것이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통일부 통일교육원b 2015, 175-176).

북한은 김정은 집권 후 핵실험을 4차례, 미사일 시험발사를 수차례 진행하면서 한국, 유엔, 미국, 일본, 중국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로부터 세계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국가로 낙인이 찍혀져 있다. 그동안 북한핵실험 이후 유엔안보리는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와 관련된 국제법 위반사항에 상응한 대북제재조치를 취해 왔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 10년간 유엔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조치 단행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핵실험과 미사일

www.kci.go.kr

시험발사를 더 강도있게 진행하는 반대현상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입장과 태도는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가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에 대한 자주권 확보차원이라는 방어논리를 펼치는가 하면, 유엔과 한국, 미국, 일본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북한압살정책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북한은 2017년 9월 제6차 핵실험 후 진행된 유엔과 미국, 중국,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북제재조치에 대해 체제생존전략을 강구해 나가지 않으면 안될 위기에 놓여 있다. 이번 6차 핵실험은 미국이 대북제재를 주도하면서 중국에 압박을 가하고 중국 역시 북한에 대해 이전과 다르게 북한산 수입품 금지 등 북중관계가 경색되는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다. 그동안 북한 핵실험 은 그 배후에 중국이 북한을 직간접적으로 보호해 왔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그 근거로서 북한의 전체 무역교역량 90% 이상이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는데서 단적인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 이번 6차 핵실험에서도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게 된 경위도 그동안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조치가 실효성이 떨어지게 된 배경에는 중국의 북한지원, 북중관계의 특수성, 북중 밀무역, 북한핵실험에 대한 중국 기업의 지원 및 연루 등을 들 수 있다.

북한이 유엔과 미국 그리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조치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핵실험을 강행하고 있는 이유는 김정은 체제에서도 핵·경제병진노선을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김정은은 2017년 10월 조선노동당 당중앙 전원회의에서 최룡해와 김여정을 비롯한 주요인사들의 조직개편을 실시하였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2016년 5월 조선노동당 제7차 당대회 개최한 것과 연관지어 볼 때, 북한 노동당에 김정은 인사를 점진적으로 포진시켜 당·정·군을 확고히 장악해 나가려는 의도로 보인다.

북한은 6차 핵실험으로 북미 간 대결국면을 보이면서 국제적으로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있다. 그러나 유엔과 미국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결코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분명하고, 이는 미국의 국제적 위상과 미국의 안보적 차원에서 양보할 수 없는 국가이익과도 연관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미국은 최근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위협 대응차원으로 한국의 경북 성주군에 사드배치를 완료했다. 이로 인

www.kci.go.kr

해 한중관계는 한중수교 이후 최악의 양국관계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미중관계의 간극을 외교적으로 이용하고자 한다.

북한은 1990년대 중반 구소련과 동구사회주의권 국가들이 붕괴되고 그 여파가 중국과 베트남 등에도 이어졌으나, 김정일은 국가체제유지의 마지막 보루를 군부로 인식하고 선군사상을 기반으로 한 '선군정치'를 전략적 카드로 내밀어 북한체제 붕괴를 막았다. 당시 북한은 아사자가 약 200만 명에 이를 정도였음에도 체제생존을 지켰다. 북한의 체제생존이 가능했던 것은 북한사회주의체제 자체가 군부체제로 병영국가체제의 사회구조였기에 가능하였다. 따라서 6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조치가 이전과 다르게 치명적으로 북한체제에 타격을 주지 않는 대북제재 카드라면, 북한체제는 붕괴보다는 체제결속이라는 반대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대북제재가 심화되면 현상적으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등의 유화국면으로 전환될 수는 있겠지만, 이는 오히려 체제생존보다는 붕괴의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북한의 이러한 체제생존전략은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이 1990년대 소련을 비롯한 동구 사회주의권 국가와 동아시아 중국, 베트남 등의 국가들이 경제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를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했던 체제전환을 시도했던 사례들과 비교해보면 정치적, 경제적 부문에서 당분간 김정은 군부체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핵실험을 통한 북미대결과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을 모면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사회주의 체제전환 사례분석이 중요하다. 그러나 북한은 체제전환 정책의 핵심내용이라 할 수 있는 안정화와 세계화, 민영화, 자유화 등의 요소가 배제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다(강성진·정태용 2017, 20-22).

4. 관련이론 적용

본 연구에서 적용되는 이론은 현실주의 관점에서 21세기 세계질서에서 초강대국인 미국과 약소국인 북한의 강대국과 약소국의 국제관계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북미관계를 놓고 볼 때, 한 쪽에서는 적극적으로

www.kci.go.kr

핵무기를 보유하여 강대국의 위협을 상쇄시키려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약소국가가 핵무기를 폐기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양쪽의 공통분모는 모두 국제관계에서 주도권과 군사적 패권지위를 유지확보하려는 국가이익과 국제안보질서로 연결된다. 현실적으로 미국은 북핵실험을 근거로 대북제재조치를 시도하여 미국의 위상을 확보하려는 강대국의 입장과 초강대국 미국의 압도적 군사력에 대항하여 국가체제생존을 유지하고자 하는 필사적인 북한의 입장을 현상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북미관계의 현상적인 문제는 이미 기원전 460년 전에 투키디데스(Tukeydides)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국제관계를 통해 충분한 역사적 교훈을 전해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전 현실주의자로 분류되는 투키디데스의 현실주의적 관점을 중심으로 북한핵실험을 둘러싼 유엔과 북미관계, 미중관계 등을 적용하였다. 고대 에게해 패권을 놓고 쟁탈전을 벌여온 강대국 아테네와 약소국인 스파르타가 강대국 아테네의 위협으로부터 체제를 유지하고자 스파르타 동맹과 델로스(Delos) 동맹 간의 30년간 치열하게 전개된 전쟁사례를 통해 각 국가 간의 입장과 리더십, 국가들의 지향목표 등은 현대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투퀴디데스, 천병희 역 2015, 8-14).

미 트럼프 행정부는 북핵의 지속적인 핵실험에 대해 이전 미국의 대북정책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지속적인 핵개발을 시도하고 미국 본토까지 핵미사일로 위협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미국의 안보위협 국가로 판단하고 이전 미국의 대통령들이 보여주지 않은 강경한 대북제재조치를 취하는 모습은 미국이 북한의 약소국이 세계경찰국가인 미국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이를 무력으로 제압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중세 강대국인 로마가 강대국에 약한 세력인 아카이아동맹과 아이톨리아 동맹세력에게는 우호적이나 마케도니아와 같은 도전세력에게는 단호하게 힘(Power)으로 제압하여 기를 꺾어 놓았던 패권사례와 매우 유사하다고 하겠다(니콜로 마키아벨리, 신동준 역 2016, 69-93).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 2006년부터 1차 핵실험을 시작하여 2017년 9

www.kci.go.kr

월까지 총 6차례 핵실험을 감행하였음에도 무정부 상태인 국제관계에서 비록 유엔이라는 국제기구는 존재하나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유엔의 역할과 기능의 한계에서 오는 중앙정부의 부재에 대한 회의감을 가질 밖에 없는 21세기 국제적 현실도 해결과제라는 점에서 그동안 유엔의 대북제재 조치는 적절했는가? 북한은 이러한 유엔의 대북제재 조치로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폐기했는가?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중국과 러시아의 태도는 국제적 관점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가? 등에서 결국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핵실험이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발언으로 미국의 국익과 안보위협이 심화되자 전례없는 한반도 미 항공모함 전력의 출동으로 대북제재 수단으로 강대국 미국의 군사력 과시는 정당하고 건재한가? 현실주의는 국제관계가 무정부상태이자 정글세계와 같이 여전히 강자와 약자 간의 투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정치적 수단인 군사력인 힘(power)으로 자신의 국가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자조(self-help), 자위(self-defense)를 동해 생존하고, 안보딜레마와 같은 군비증강을 통해 도전세력을 제압한다는 점에서 현실주의 이론 적용이 본 연구에서 타당성과 설득력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하겠다(김열수 2015, 33-37).

Ⅲ. 유엔의 북핵실험 대북제재 실효성

1. 유엔의 대북제재조치

북한은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행사를 기점으로 SLBM과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면서 경제력 건설과 핵무력을 완성하기 위한 계획을 단계적으로 밟아왔다(한국국방연구원 2016, 123-137). 이는 김정은 3대세습 체제에서 2013년 3월 채택한 핵·경제병진노선을 공식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실제로 북한은 김정은 체제 들어서서 4차례의 핵실험과 화성-14호, 화성 12호, 화성 15호를 지속적으로 시험발사를 했다는 데서 그들의 방향성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유엔은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감행 이후 유엔안보리를 소집하여

www.kci.go.kr

북한의 핵실험은 국제사회의 도전이며 유엔회원국으로서 국제법 위반행위로 간주한다며 대북제재조치로 유엔안보리 제1718호, 1874호, 2094호, 2270호, 2321호, 2375호를 결의를 한 바 있다. 2006년부터 유엔은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평화와 동북아안보 위협행위로 간주하며, 북한과 우호적인 중국과 러시아도 북핵실험에 대해 대북제재에 만장일치로 결의하였다. 대북제재조치는 2006년부터 2017년까지 그 수위가 점차 높아졌고, 제재대상 품목도 늘어났다. 그러나 유엔의 대북제재조치 성과는 북한 핵실험 후 약 10년간 대북제재의 실효성이 북한체제나 북한경제에 북한체제자체를 흔들 정도는 아니었다.

〈표 1〉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제재조치 내용
제1차 핵실험	유엔안보리 제1718호	무기, 핵미사일개발관련물자, 사치품 등 17개 조항
제2차 핵실험	유엔안보리 제1874호	화물검색, 무기 징수, 수출통제, 금융제재 등 34개 조항
제3차 핵실험	유엔안보리 제2094호	진주, 귀금속, 요트, 고급스용차, 경주용차
제4차 핵실험	유엔안보리 제2270호	이전 결의 사항에 무기 금수 품목 증가, 제배분야 무기로 한정, 전문 12개, 본문 52개항
제5차 핵실험	유엔안보리 제2321호	제4차 핵실험 대북제재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조치 강화 및 구체화
제6차 핵실험	유엔안보리 제2375호	대북 석유제품은 연200만 배럴로 제한, 유류공급 30%가량 차단

출처: 김주삼, 『인문과 사회 21』 (제18권 제2호, 2017), p.1300, 『(연합뉴스 2017. 유엔안보리 북핵·미사일 제재결의 일지. 2017.12.23.) 참조, 재정리.

2. 미국의 대북제재조치

미국은 북한 핵문제에 대해 1994년 제네바 합의, 2003년 북핵6자회담 등 북미 간 다자안보틀에서 북핵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왔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 본토까지 타격하겠다는 입장에서 지역적 차원이 아닌 전세

www.kci.go.kr

계적 차원의 문제로 부상한 지 오래됐다(박봉규 2017, 109-111).미국의 대북제재조치는 미국의 전략결정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최고와 충분, 무력사용과 군사전략, 가치의 영향력, 경제적 이익의 역할”(제임스 스타인버그 · 마이클 오핸런, 박영준 역 2015, 85-122)이 영향력을 발휘된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핵실험 기간(2006년~2017년) 동안 미국은 부시 행정부, 오바마 행정부, 트럼프행정부가 북한의 핵실험을 계속 제재하고 지켜보았다. 부시행정부는 미국의 대외정책을 중동지역에 집중하였으나,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1기에서는 중동지역에 집중을 했고, 제2기 행정부에 들어와서 아시아회귀전략(pivot to Asia)으로 북미간의 긴장관계가 지속되었으나 직접적인 대북제재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미국은 북한의 6차 핵실험 후 미국의 핵심전력자산을 한미연합군사훈련 일환으로 한반도에 총집결시켜 대북 군사행동을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6차 핵실험 후 트럼프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에게 ‘리틀 로켓맨’ 이라 호칭하며 지난 25년간 미국의 대북 핵 대응책을 비판하며 군사옵션을 언급하고 있다. 미국은 2017년 10월 15일~20일 한미연합 해상훈련을 계기로 미국의 핵심전력 자산인 핵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함과 이지스 구축함과 전략폭격기 B1-B 전략폭격기, F-35A스텔스 전투기 등이 출동하여 북한의 핵미사일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훈련을 실시하기로 하였다(MBC 2017). 이러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제재로 북한은 국제적으로 고립 국면에서 평팡올림픽을 계기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개최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북핵 비핵화문제에 대해서는 북미 당사자가 어떻게 정리될 지는 아직 장담할 수 없다.

3.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조치

북한의 6차 핵실험 후 유엔은 유엔안보리결의를 통해 대북제재조치가 강도높게 진행되자 미국중국, 러시아, EU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분위기는 이전 북한5차 핵실험 때까지의 양상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 주었다. 미국

www.kci.go.kr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북한 핵실험에 대해 소극적이었던 중국에 대해 세컨더리 보이콧 등과 같은 강도 높은 제재조치를 취하자 중국은 유엔의 대북제재조치를 이행할 것을 천명하였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원유공급을 제한하기로 하고 대북수출과 대북금융 중단조치를 취하였다. EU는 6차 핵실험한 북한에 대한 독자적인 대북제재조치를 발표하였고,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북한대사를 추방하였다. 이번 6차 핵실험에서 특이한 사항은 그동안 북한과 군사관계가 우호적이었던 남미 쿠바가 북한대사를 추방하였다는 점에서 국제적 대북여론은 북한에 대해 비우호적 태도를 보이고 있음이 여실히 나타난다.

아무래도 이러한 국제사회의 대북여론의 전환은 북한의 지속적인 핵실험과 세계평화안보 위협과 독재국가로서의 북한체제에 대한 시각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 트럼부 행정부에서 대북 군사옵션까지 거론하면서 미국이 미국과 무역거래하는 전세계 모든 국가들에 대해 북한과의 거래 중단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 당분간 단기적 효과는 있지만 여전히 미지수이다. 이러한 미국의 강경한 대북기조와 대북제재조치로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중단하는 적극적인 대북제재조치에 동참행렬로 당분간 북한의 국제적 고립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4. 한국의 대북제재조치

북한의 핵실험(2006년~2017년) 기간 동안 노무현, 이명박, 문재인정부 등이 북한 핵실험을 지켜보았다. 노무현 참여정부에서는 남북관계가 활발하게 전개되는 시점에서 2006년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하여 남북관계에 찬물을 끼얹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 노문현 대통령은 북한과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는 인내심을 보였다. 이명박 정부(2008~2012년)에서 북한은 2009년 제2차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박근혜 정부(2013년~2017.5) 시기에는 2013년 3차 핵실험과 2016년 1월에 4차 핵실험과 동년 9월에 제5차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문재인 정부

www.kci.go.kr

(2017.5~현재)에 들어서서 북한은 제6차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북한의 6번의 핵실험은 한국의 여야정권에 상관없이 북한의 전략적 목표대로 핵실험을 감행했다는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다. 그러나 북핵시기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은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정부 등 정권교체에 따라 진보와 보수성향의 정권으로 분류할 수 있고, 4개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도 정부의 일관된 모습이 아닌 정부성향에 따라 대북정책도 달라져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반도상황은 1953년 7월 정전협정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시험발사 등 전략무기개발 상황은 여야 정권의 구분없이 대북안보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인식을 우선되어야 한다. 1991년 몰타선언에 따라 노태우 정부시절 한국은 한반도비핵화를 선언하였고, 2000년 남북정상회담, 2003년 북핵6자회담 참가,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등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관계 개선을 시도하였으나, 북한의 입장은 한국의 입장과는 전혀 상반된 핵보유선언을 세계에 공표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정부의 소극적인 북한의 전략무기개발에 대한 대응은 제고될 필요성이 있다.

Ⅳ. 북한의 체제생존전략

1. 대북제재 차단과 체제결속

북한은 2012년 1월 김정은 체제가 시작된 이래 총 4차례의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핵실험 뿐만 아니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해상 잠수함에서도 발사가 가능하는 미사일발사체계(SLBM) 체계 시험발사를 계속해 오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전략무기개발 실험에 대해 유엔과 한국, 미국, 일본, 중국,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 행위가 국제평화를 파괴하는 행동이라고 대북제재를 가하고 비난을 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지속적인 전략무기 개발사업은 계속되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개발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유엔안

www.kci.go.kr

보리에서 세계3차 세계대전을 치를 준비가 되어있지 않는 한 북한에 대한 현실성있는 대북조치 카드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은 대북제재조치로 트럼프 행정부에서 북한을 강력히 압박은 하고 있으나, 이는 클린턴행정부와 부시행정부에서도 이미 사용했던 대북제재 카드의 일환이다.

북한의 외교적 카드는 북핵개발을 통한 자위권 확보와 이를 통한 북미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은 이전에도 북한과의 관계에서 비공식적 북미회담 등의 사례를 비추어 볼 때 국제적으로 미국의 국익을 확보한 다음 북미협상 국면으로 전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은 이러한 시기와 국면을 만들기 위해 이미 병영국가에서 70년 이상 다져진 주민동원과 대대적인 반미구호 행진, 대남위협 등으로 체제결속을 강화하고 김정은에 대한 절대적 충성 유도와 기득권 세력인 군부체제를 공고히 보장하는 선에서 북미관계를 유지해 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2. 핵 · 경제병진노선 강행

북한은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와 압박 속에서 심지어 북한에 절대적으로 우호국가였던 중국마저 유엔안보리결의 이행을 선언하는 상황에서도 핵실험의 정치적 정당성을 주장하고 북미대결 양상으로 나오고 있다. 이러한 북한체제는 1인 절대권력체계와 이를 뒷받침하고 주체사상은 사상의 도구로서 북한 특수성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북한경제체제는 수령제를 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 두 가지는 북한경제 운영과도 연관된다. 일반적으로 기존의 사회주의 국가들은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권의 독점, 국가 내 물적·인적자원에 대한 관리권의 독점, 경제정책 결정권의 독점”(박형중 2004, 67−72)이 특징인데 북한의 경우 이러한 현상이 김정은 3대 세습권자에게 절대적으로 집중되어 있다. 북한경제는 사회주의 체제전환 국가들의 사례를 적용해 볼 때 아직까지 중앙정부가 인민경제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경제제도개혁은 1980년대, 1990년대 중반, 2000년대 초반 등 간헐적으로 시도는 했으나, 사회주의

www.kci.go.kr

계획경제의 구조적인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었고 결과론적으로 북한경제정책의 실패로 평가할 수 있다.

북한경제는 1990년대 고난의 행군 후 중앙정부에서 주민들의 식량 등을 보장하는 배급제사회주의 행태에서 점점 벗어나고 있다. 북한의 배급제는 이미 중단된 지 오래됐고 장마당이 수 백개 형성되어 이미 중앙정부가 경제통제 기능을 상실하는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러한 북한경제현상은 초기 자본주의 현상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1990년대 국제사회의 북한 붕괴설이 파다했을 때보다 북한경제 지탱력은 당분간은 건전하다고 하겠다. 특히 미국의 대북압박 속에서도 중국이 핵심이익 차원에서의 국지전 불가원칙은 변함없다는 점에서 북한 김정은 정권은 북중관계, 북미관계, 미중관계 등을 활용한 핵·경제병진노선을 지속적으로 추진시켜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핵·경진병진노선을 통해 김정은 정권을 공고히 지켜주고, 기득권 세력인 군부결속과 주민결속을 통한 체제안정을 유지하면서 북미관계개선을 계속 시도할 수 있다.

3. 지속적인 핵실험 지속 카드로 북미협상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6차 핵실험 후 대북제재조치로 경제조치와 군사옵션 등의 핵심적인 사안들을 주장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행사와 실효성에는 상당한 전략이 필요하다. 미중관계라는 큰 틀에서 미국이 아무리 대북제재 조치를 한다고 해도 중국이 북한 배후에서 북중관계를 지속시켜 나간다면 이를 막을 방도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미중관계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국의 전략적 목표차원에서 한반도 등 지역분쟁에 중국이 미국과 충돌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며, 북한이 없는 중국의 존재는 상당한 안보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북중관계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한대로 지난 25년간 북미 핵문제에서 결정적인 외교적 성과를 거둔 바 없다. 1994년 클린턴 행정부의 북미제네바 합의 백지화, 2003년부터 추진한 북핵6자회담 중단, 오바마 행정부의

www.kci.go.kr

대북 억제전략 등은 오히려 북한 김정은 체제가 북핵실험을 단계적으로 강도높게 핵무기 보유를 향한 발걸음을 옮기게 하였고 결국 핵무기 보유국가들이 핵실험 완성단계라고 얘기하는 6차 핵실험 정점에 오게 했다는 것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군사옵션을 제기하지만, 과연 군사옵션을 강행하여 미국이 단순히 국익과 불이익을 가운데 미국이 대북군사제재로 얻을 수 있는 국제적 손실도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5차 핵실험 때보다 무려 10배 가까이 핵실험 강도를 높게 한 북한에 대해 안보딜레마를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북한은 이러한 미국의 입장을 내다보면서 대북제재 1년 이상을 고난의 행군기와 같이 버틸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얻고자 한 핵무장력을 확보한 이상 더 이상의 핵실험은 당분간 무의미하며 더 이상 할 것도 없다고 본다. 이러한 북한의 의도는 핵실험을 통해 남북한관계에서 군사력의 절대적 우위와 북한체제 존속 및 대미협상 카드를 확보하고자 한 것이다(윤지원 2016, 102-103).

북한은 이러한 동북아지역의 역학관계를 활용하여 핵개발과 협상전략을 기존의 핵개발, 현재의 핵개발, 미래의 핵개발로 구분하여 기존의 핵개발을 인정받고 현재와 미래의 핵개발은 중단 내지 폐기하는 계획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북한과 미국, 중국, 한국 등 이해관계와도 일치한다는 점에서 현실성 있는 카드라고 할 수 있다.

북한 군부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북미협상을 통한 현재와 미래의 핵개발을 중단 내지 폐기하는 조건으로 기존의 핵개발을 인정받는다면 미국의 대북 군사위협과 대북제재조치 해결 등 북한의 실질적인 전략적 목표에 성큼 다가설 수 있다. 이러한 가정이 현실화 되었을 때 김정은의 군부의 절대적 지지와 인민들로부터 리더십 확보는 결국 북한사회주의체제의 지속으로 이어지게 된다. 현재 북한의 입장에서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남북교류와 남북관계 활성화, 북중관계 개선으로 전환할 수 있고, 기존의 북핵을 미국으로부터 인정받으면서 북한체제를 유지해 나갈 가능성이 있다. 1994년 제네바 북미핵합의서는 북한이 아직 개발도 되기 전이었음에도 북미관계 개선으로 모든 국제적 관계를 개선할 수 있었다는

www.kci.go.kr

교훈에서 이미 개발된 핵무기에 대한 인정으로 북미관계 개선과 남북관계개선, 북중관계 개선으로 북한체제는 사회주의체제에서 본격적인 자본주의 시장화로 나설 수 있다.

4. 북중관계 지속

북한체제 존속이 원동력은 정치적 측면에서는 김정은과 군부의 결속력에 있겠지만, 경제부문에서 가장 큰 원동력은 중국의 대북지원일 것이다. 북한의 6차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대북송유관을 중단하지 않고 공급량만 줄이기만 하였다. 이는 중국이 아무리 북한이 핵실험으로 대북제재를 받더라도 중국의 이익차원에서 북한체제를 존속하게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북중관계는 앞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북한의 대중의존도 90% 이상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는 데서 쉽게 증명된다고 하겠다. 중국은 김정은정권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북한에 대한 불만과 불쾌감을 가졌을 뿐, 북핵실험이 중국의 안보이익까지 위협할 정도는 아니라는 점에서 관점의 차이가 있다. 중국은 북한이 6차 핵실험한 당일 시진핑 주석이 샤먼에서 브릭스 정상들과 국제회의를 주재하는 시점에 있다는 점에서 강도높게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와 근접한 연변자치주 근처에서 중국 거주자들이 모두 느낄 정도의 지진효과를 경험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중국의 한국에 대한 사드배치 반대 명분은 동력을 상실했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유엔안보리 결의 이행조치 사항 여부에 대해서도 중국이 명확한 입장을 밝힐 수 밖에 없는 국제적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었다. 중국은 북한 6차 핵실험으로 미중 패권적 입장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요구사항을 이행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미중 무역구조에서 발생하는 미국의 적자문제와 중국기업이 북한핵실험 과정에서 제공한 재료공급 등 북핵실험과 연루된 중국기업 리스트 등은 중국의 국제적 신인도와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과 국제사회에 대한 중국의 G2국가로서 위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입게 되는 것으로 중

www.kci.go.kr

국이 상당히 곤궁한 입장에 빠지게 되었다. 중국은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세컨더리 보이콧에 대한 동의와 유엔대북제재조치 이행에 동의를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입장에서 북중관계는 달리 나올 수 있다. 중국의 동북아지역 안보적 상황에서 북한의 대북제재와 군사옵션을 통한 체제붕괴보다는 중국이 중재자로서의 위치를 확보하고 북한체제의 장기적 시장경제화를 추진하는 것이 중국의 안보적 이익에 훨씬 부합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당분간 대북제재에 동참하겠지만, 북핵제재 고비 국면이 지나면 지금까지 유지되어온 북중관계를 지속하면서 동북아 지역안정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북한의 대중의존도는 심화될 수밖에 없고, 체제생존도 당분간 유지될 수 있다.

5. 무기수출 비공식적 라인 동원 체제유지

2002년 미국 케리 특사는 북한이 파키스탄의 핵미사일개발 프로그램 공동개발하고 있다고 발표하여 북미관계가 악화된 적이 있다. 이후 미국은 2005년 9.19공동성명에서 북핵폐기에 합의하기로 하였으나, 이면에 우라늄방식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강동한 것이 적발되어 미국은 이러한 북한에 대해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에 대해 대북송금을 동결한 바 있다. 북한은 그동안 국제적 법망을 피해 가면서 중동지역 국가들과 아프리카, 동남아국가들과 지속적인 군사교류를 추진해 왔다. 북한과 이들 국가들과의 특징은 북한제 노동호 미사일 무기수출거래 가 밝혀졌다. 이란, 이라크, 시리아, 오만, 리비아, 파키스탄 등 국가들에 들어간 미사일은 북한제 노동호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북한제 전략무기를 제외하더라도 북한제 군사부품, 군사인력 공급, 노동자 인력송출, 사이버범죄 등으로 현재 김정은 3대세습체제를 유지해 주는 원동력으로 파악되고 있다(함중영 2017, 104-149).

www.kci.go.kr

Ⅴ. 결론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한반도정세는 극도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노동당위원장 간의 격렬한 말싸움과 팽팽한 군사대결양상은 세계평화안보와 한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 등 동북아지역안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엔안보리는 그동안 10년 이상 북핵실험에 대해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조치를 취했으며 미국은 북한과 거래하는 세계 모든 국가들과의 금융관계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최근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이르기까지 유엔과 미국 등은 지속적으로 다양한 대북제재조치를 취해 왔으나, 북한은 이러한 대북제재조치에 아랑곳하지 않고 핵보유국 인정을 주장하고 계속해서 핵실험을 횟수를 늘려나가면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자 한다. 북한은 김정일정권에서 2차례의 핵실험과 김정은 정권에 들어서서 4차례의 핵실험을 감행했다는 점에서 북한정권은 북한의 '우리식사회주의체제' 방식을 계속 고수하고 '핵ㆍ경제병진노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유엔은 이러한 북한의 행동에 대해 단호한 대북제재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유엔은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 것은 유엔 회원국으로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핵학산금지조약(NPT)자격문제와 국제법 준수 등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지적하였다. 이러한 국제법 위반내용들은 무정부 상태인 국제사회에서 국제기구인 유엔의 대북제재의 한계를 현실적으로 드러내는 대목이기도 하다. 미국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이전 행정부에서 취했던 모든 방법 이상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미국과 정면으로 군사대결을 불사하겠다는 자세를 보이면서 한반도에서 제2의 6.25전쟁이 발발할 가능성도 완전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북한이 이렇게 나온 배경에는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애매한 입장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첫째, 북한의 핵실험 기

www.kci.go.kr

술인력이 지난 구소련붕괴 후 고급기술인력이 북한 핵실험에 직간접적인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중국은 북한 핵실험에 대해 대북제재조치에 강력히 대응하지 않고 중국의 이익차원에서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하였지만, 이러한 중국식 북한 핵 해법은 결국 북한의 고강도 핵실험 단계로 발전시키는 요인 중의 하나로 작용하였다는 것이다. 셋째,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안보리에서 대북제재조치에 대해 소극적으로 나서면서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실험을 계속 방조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소극적인 대북제재 현상은 탈냉전체제에서도 동북아지역에서의 한·미·일 공조체제에 맞서는 북·중·러의 반작용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유엔과 미국 그리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조치에 대해 핵보유국 마지막 단계인 6차 핵실험을 통해 핵무장력을 담보로 미국과 유엔 및 국제사회에 북한의 핵보유를 선언하고 핵무장력 3원체제를 계속 준비하면서 체제생존전략을 강구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체제생존전략은 첫째, 지속적인 핵실험과 미사일시험발사를 통해 군부체제에 대한 충성도 결집과 주민결속을 다지면서 김정은체제의 건재함을 과시하고 이를 확장시켜 나갈 것이다. 둘째, 북한은 지속적인 핵실험을 통해 미국과의 북미정상회담 등 북미협상을 통해 유엔과 미국, 국제사회의 전방위적인 대북제재조치를 차단하려고 할 것이다. 셋째, 북한은 동북아지역에서 중국의 안보적으로 불리한 약점을 이용하여 중국이 결국 북중관계를 원만히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유엔과 미국, EU로부터 불어닥친의 대북제재의 국면을 모면하려고 할 것이다. 넷째,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조치로 정식채널이 차단된 상황에서 비공식적 루트를 통하여 밀무역, 무기수출, 사이버 범죄활동, 노동자 해외송출 등의 방법을 통해 외화를 획득하려고 할 것이다.

한국은 북한의 작년 9월 3일 6차 핵실험으로 남북한 군사불균형 상황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 한국의 북한의 계속된 핵실험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전략은 첫째, 그동안 국제적으로 유엔의 대북제재조치의 실효성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정부차원에서 여

www.kci.go.kr

야를 막론하고 북한의 북핵·미사일 대남도발위협을 전국민들에게 홍보하고 대남 핵도발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사능 오염에 대비한 방사능 오염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김정은 체제에서 계속되는 핵실험과 미사일위협에 대해 한미동맹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한미동맹체제를 기반으로 북핵 대북제재 조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넷째, 한국은 북핵에 대한 비핵화 원칙 속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추진되어야 하며, 북핵실험에 대해 기존의 핵무기 평가, 현재의 핵개발 중단과 미래의 핵개발 프로그램이 폐기를 단계적으로 조치해야 하고, 다섯째, 기존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체제로 전환될 수 있도록 국내외적 노력을 동시에 벌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북한체제는 다른 사회주의체제 국가들과 다르다는 점에서 북한체제의 제도적 개선과 대외적 개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정부의 북한에 대한 다각적인 정보유입 정책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www.kci.go.kr

<참고문헌>

강성진·정태용. 2017.『경제체제 전환과 북한: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에서』.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문화원.
고봉준. 2017.『핵무기의 정치』. 서울: 명인문화사.
김열수. 2015.『국가안보』. 파주: 법문사.
김주삼. 2017.『인문과 사회 21』. 제18권 제2호.
니콜로 마키아벨리, 신동준 역. 2016.『마키아벨리 군주론』. 고양: 인간사랑.
박봉규. 2017.『한국과 국제사회』. 제1권 창간호.
박형중. 2004.『북한의 개혁·개방과 체제변화』. 서울: 해남.
박휘락. 2017.『북핵위협과 안보』. 성남: 북코리아.
윤지원. 2016."북한 미사일 위협의 확장과 우리의 대비 방향."『국방과 기술』. 서울: 천일
정성장. 2011.『현대 북한의 정치: 역사·이념·권력체계』. 파주: 한울아카데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2012.
이종석. 2016.『분단시대의 통일학』. 서울: 개마고원.
제임스 스타인버그 · 마이클 오핸런, 박영준 역. 2015.『21세기 미중관계』. 서울: 아산정책연구원.
투키디데스, 천병희 역. 2015.『펠로폰네소스 전쟁사』. 파주: 도서출판 숲.
통일부. 2017.『2017년 북한 신년사 분석』. 서울: 통일부.
통일부 통일연구원. 2015.『2016 북한이해』. 서울: 통일부 통일연구원.
함중영. 2017.“김정은 정권에서 나타난 북한의 초국가적 조직범죄 활동 변화”,『국가정보연구』. 제10권 1호.
히라이 히사시. 2012.『김정은체제 북한의 권력구조와 후계』. 파주: 한울아카데미.
연합뉴스. 2017. 유엔안보리 북핵·미사일 제재결의 일지.
신석호, 北 김정은 2018 신년사, http://news.donga.com/3/an/20180101/87977413/1(최종검색일: 2018.01.10.).

투고일 : 2018년 1월 30일 · 심사일 : 2018년 2월 20일 · 게재확정일 : 2018년 3월 8일

* 김주삼은 조선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와 중국 길림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조선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군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는『북한인권 실태와 해결방안』(프라마 북스 2012), 등이, 논문으로는 "조선족과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적응과 통일과정에서의 역할"『디아스포연구』제10권 제2호(2016); "G2체제에서 중국의 군사전략 변화양상 분석"『대한정치학회보』(제24집 4호(2016) 등이 있다.

www.kci.go.kr

<Abstract>

Efficacy of UN's Sanctions on North Korea's Nuclear and North Korea's Regime Survival Strategy

KIM, JOO-SAM
(Chosun University)

North Korea conducted a total of six nuclear tests from the 1st test of 2006 to September, 2017. North Korea developed an armed forces security strategy at the level of regime protection and defense to respond to U.S. hostile policy. However, it is certain that strategic goals of North Korea's nuclear test were to overcome a crisis in North Korea's regime through US-North Korea negotiation and complete nuclear armed forces for socialist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North Korea's continuous nuclear test is a direct factor in threaten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an indirect factor in security dynamics of Northeast Asia. The U.N. Security Council has enforced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through six resolutions against North Korea's reckless nuclear test for the past 10 years. However, Kim Jong-Un's regime is in a position to stick to simultaneous pursuit of nuclear and economic development in spite of anti-North sanction of international society including U.N. and U.S.A. It is understood that North Korea was stimulated to conduct intense nuclear test as U.N. and U.S.A's anti-North sanction was not effective on North Korea. Full-scale and local wars are expected as military options, one of anti-North sanctions of the Trump administration.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attempted diplomatic pressure strategy as a secondary boycott unlike previous administrations. Nevertheless, North Korea has stood against U.N. and U.S.A's anti-North sanction with brinkmanship tactics, announcing full-scale military confrontation against U.S. It is judged that North Korea will pursue simultaneous nuclear weapons and economic development in terms of regime survival. North Korea will have less strategic choices in that its regime may collapse because of realistic national strategy between U.S.A. and China.

Key words : North Korea's nuclear test, UN's anti-North sanction, Regime survival strategy, North America's relations, The variable of regime collapse

www.kci.go.kr